

민주 “정치 검찰 칼에 맞서 불체포 특권 정당하게 행사”

오늘 의총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논의...단일대오 전열 정비 지도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포기하면 체포안 부결” 강경 메시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는 여론에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대오의 전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여론 지도부의 ‘이재명 구속 수사’ 주장이 잇따르자 이에 맞서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당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자신했고 있

지만 이탈 표 규모에 따라 당내 분열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 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의 증거인멸(가능성)을 내세우며 현직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삼류 정치 영장을 베껴 읽었다”며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영무세처럼 한통속한 법무부 장관과 정치 검사의 역지

주장을 따라 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꼬아붙였다.

정경래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이다. 그런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라”며 “그러면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전횡을 저지하고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정치 검찰의 칼에 맞서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 칼럼을 통해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며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탤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부수석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에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먼지까지 털다 안 되니 ‘산소 털이’까지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날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야당 탄압과 관련된 상황은 물론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

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1항에 따라 이재명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자 신의 한수”라며 “자기 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꾸로 힘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재명,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 격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사의 표명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처장은 지난 17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날부터 연가에 들어갔다.

안 사무처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안 사무처장 사표가 수리되면 권익위 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직은 전현희 위원장만 남게 된다.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등 정부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 위원장과 안 사무처장은 이전 정부에서, 김태규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과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불편한 동거’ 상태가 지속됐다.

이들 정부직 4인이 주 1회 주기적으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차담회도 올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우수 조례 ‘3관왕’

한국지방자치 학회 주관...단체·의원 개인 부문·우수 공무원상 수상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최근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과 우수 공무원상 등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로 꼽힌다.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하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은 박미정(민주·동구 2)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다.

기존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통합·연계하고 이를 확장해 시민 누구나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6개월 이상 민·관·정·학계의 토론과 연구로 진행된 입법 과정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다.



박미정 시의원 신수정 시의원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고,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조례라는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우수 조례를 만드는 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김현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우수조례 3관왕 수상은 그동안 공무하는 광주시의회가 입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다”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치 개혁 논의, 국회의원 빠지고 국민 참여해야”

초당적 의원모임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

청년 정치인들이 20일 “정치 개혁 논의에 국회의원 빠지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주도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현 정치가 여야 간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언론 비판에 강대강으로 맞섰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정치적 자유도 봉쇄당했

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내부에도 정치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가 설 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금의 정치는 싸우고 있는 쟁점이 틀렸다. 지극히 정치인들만의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어 국민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국민과 국가의 전체 상황을 봐야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는 오늘날 쳐다보고 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정치개혁) 논의에서 다 빠지고 국민들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우리 정치는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단어 10개~15개를 꼽아 상대 정당을 부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친일·독재 정당, 좌파·빨갱이 정당, 재벌·하수인 정당 등으로 상대방을 부른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대를 그렇게 불러서 일부 강성 지지층에 아부·아첨해 일부의 지지를 얻으려는 욕망”이라며 “상대 정당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을 때가 정치개혁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극단의 진영 대치가 해소되어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화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3>신축원룸(상가) 매매</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 급매 14억5천 (용7억)</p> <p>010-6670-9800</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td> <td>▶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td> <td>▶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td> <td>▶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p>010-2614-9801</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